

# 배달앱의 빛과 그림자... 수수료 비싸지만 매출엔 도움

중개수수료·단말기 이용료 등 수수료 '요기요'가 가장 높아 영세업체는 서면기준도 전무 공정거래 법률·제도 마련해야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큰 부담이지만 가게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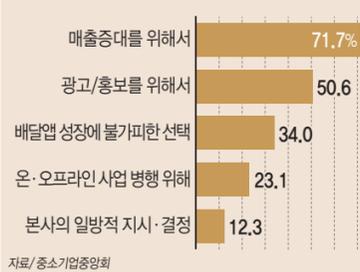
배달앱 가입 동기도 '매출증대'나 '광고·홍보'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중개수수료, 단말기 이용료 등 수수료는 '요기요'가 제일 높았다.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쳐 가맹점들 대부분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절반 가량은 할인이나 반품, 배송 등을 명시한 서면기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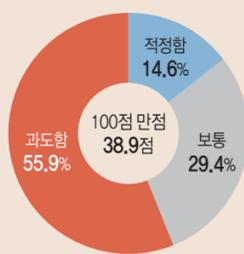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가 피자, 치킨, 중식 등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4일 내놓은

소상공인 배달앱 입점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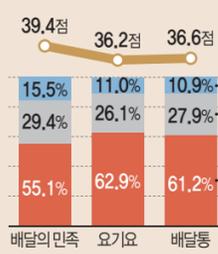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수수료 수준 적정도



업체별 수수료 적정도



과 의무의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 (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의 등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달앱측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선 실태와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가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그쳤다.

배달앱에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100%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를 꼽았다.

배달의 민족이 2015년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아예 없앤 가운데 관련 수수료와 단말기 이용수료는 요기요가 가장 높았고, 배달통이 뒤를 이었다.

외부 결제 수수료는 3곳의 배달앱이 3.3%로 모두 같았다. 업체별 수수료 적정도에 대해선 배달의 민족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다.

배달앱에 입점한 동기(복수응답)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가 71.7%로 가장 높았다. '광고·홍보를 위해서'도 50.6%에 달했다.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답변도 34%였다.

가맹점들은 의도한 만큼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점 전과 비교해 81.2%가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답변도 84.8%였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곳도 80.8%였다.

반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0.6%, 1%로 미미했다. 배달앱 이용시 수수료 등은 부담되지만 매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업체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측이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가맹점에 떠넘길 가능성이 짙은 셈이다.

이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등이 아닌 독립업체·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64.1%가 서면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공정이 더욱 심했다. '있다'는 서면기준도 '쿠폰 발행 기준'(36.5%), '할인 기준'(28.8%), '판촉 행사비 기준'(16.1%) 등이지만 비율은 낮았다.

또 서면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2019년 4월 연령별 신설법인)

(단위: 개, %)

구분	연령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신설법인	2018년	632	1,859	2,491	3,059	2,375	982
	2019년	599	1,900	2,499	3,252	2,543	1,108
전년 동기 대비 증감수(율)		△33 (△5.2)	41 (2.2)	8 (0.3)	193 (6.3)	168 (7.1)	126 (12.8)

## 4월 신설법인 9425개 '역대 최고'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10.4% 올라 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4월 신설법인이 9425개로 역대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10.4% 증가해 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상승곡선을 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신설법인은 9425개로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499개 늘어 5.6% 증가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소매업이 전체 21.5%인 2023개로 가장 많이 신설된 법인이었고, 제조업 18%(1696개), 부동산업 13.5%(1273개), 건설업 9.8%(919개)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1696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등을 중심으로 2018년 4월보다 13.2%(198개) 늘어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6%(614개) 늘어난 6430개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395개 증가한 부동산

업을 필두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50개), 숙박·음식점업(75개) 등 업종의 법인이 새로 생겼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6%(3252개), 50대 27%(2543개), 30대 20.2%(1900개)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했다. 특히 40대 신설법인의 경우 부동산업과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 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498개로 전년 동월 대비 14.3%(313개) 늘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2.0%포인트 높아진 26.5%를 차지했다. 남성 신설법인은 6927개로 전년 동월 대비 2.8%(186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64개), 서울(100개), 부산(56개), 전남(45개)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많은 신설법인이 설립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설법인은 5843개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한편, 2019년 1~4월에 신설된 법인의 수도 3만 6376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703개) 증가해 2016년부터 증가세를 보인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주52시간, 단순작업 일자리 22만개 증발

단순노무직,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 탄력근무 단위기간 1년까지 늘려야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산업현장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일자리 22만개가 사라질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지표를 갖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단순노무직의 경우 산업용 로봇 등으로 빠르게 대체되기 때문이다.

단순 조립원, 수동 포장원, 부품제품 단순 분류원 등이 대표적인 단순노무직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정부 재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4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줄어들 경우 자동화가 1.1% 촉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는 21.2대다. 자동화지표는 근로자 만명 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로 산출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화지표



자료/ IFR

는 102.2대로 OECD 평균보다 약 5배 높다. 한국의 자동화지표가 OECD 회원국 중 1위인 셈이다.

아울러 OECD 국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34.8시간에서 2017년 34.4시간으로 약간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44.1시간에서 42.2시간으로 줄어들며 단축 비율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대비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로시간도 가장 빠르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정책적으

로 가파르게 줄이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자동화로 대처하게 되고, 결국 단순노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 분석 방법인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의 주52시간 단축 정책에 적용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43.1시간에서 42.5시간으로 1.3% 줄어들 경우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측은 단순노무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 기간이 최대 1년이고, 6개월인 독일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영세 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

판매·A/S망·인프라 확충 등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4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업

동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

차 판매·A/S망 구축, 충전설비 확대 등 산업 인프라 확충 및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 육성 ▲전기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전기차 개발·정비 등 기술역량 강화 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추진 ▲홍보 협조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